

제1차 먹거리대안포럼

대안농업체계의 모색

- 생산과 소비의 연대 -

일시 : 2011년 7월 19일(화) 14:00-18:00

장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

주관 : SSK 먹거리지속가능성연구팀 ·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후원 : 충남발전연구원

제1차 먹거리대안포럼

대안농업체계의 모색

- 생산과 소비의 연대 -

일시 : 2011년 7월 19일(화) 14:00-18:00

장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

주관 : SSK 먹거리지속가능성연구팀 ·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후원 : 충남발전연구원

먹거리대안포럼

먹거리대안포럼은 한국연구재단 지원 SSK(Social Science Korea;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 "먹거리지속가능성연구팀"에서 주관하는 전문가 포럼입니다. 포럼은 먹거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 다섯 가지 이념을 실천합니다.

관계성(relationship)을 회복합니다. 근대가 훼손한 농촌과 도시, 농(農)과 식(食),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상생의 근원을 찾습니다.

지역성(locality)을 지향합니다. 먹거리 위험사회의 대안은 지역입니다. 지역과 일상이 살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삶의 근원을 찾습니다.

생태성(ecology)을 추구합니다. 모든 것이 생태적이어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자연과 인간, 몸과 먹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생태적인 것이 대안입니다.

복지성(welfare)을 만들어갑니다. 먹거리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장(security)되어야 합니다. 먹거리 정의의 실현이 미래입니다.

안전성(safety)을 확보합니다. 먹거리 안전은 생명입니다. 후속 세대에 대한 의무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척도입니다. 대안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먹거리대안포럼은 이러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진행합니다.

-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포럼 (격월 포럼)
- 현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자 workshop (비정기 포럼)
- 실천활동을 위한 사회적 연대사업

제1차 먹거리대안포럼 대안농업체계의 모색 진행순서

사회 : 김홍주(원광대 교수)

인사말 14:00-14:10

기조강연 14:10-14:30

주제 :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

강연 :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대 교수)

주제발표 14:30-15:40

발표 1 : “학교급식 -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다” 윤병선 (건국대 교수)

발표 2 : “학교급식운동의 새로운 모색” 김형근(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패널토론 15:40-16:10

토론 1 : 김정택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기획단장)

토론 2 :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집중토론 16:10-18:00

기조발제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 -민선5기 충남 농정의 비전과 과제-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1. 왜 민선 5기 충남도정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하는가?

□□ 더 이상 경제성장, 수출증대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음

-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국내총생산, 수출, 국민소득은 2배 이상 증가
 - 국내총생산(GDP)은 5,046억 달러에서 1조 143억 달러로 2배, 수출은 1,504억 달러에서 4,664억 달러로 3.1배로 뛴. 일인당 국민소득(GNI)도 1만 631억 달러에서 2만 759억 달러로 약2배가 뛴
- 이 과정에서 재벌기업은 급성장
 - 2008년 4월에서 2011년 4월 3년 사이에만 우리나라 20대 재벌의 계열사는 36%, 자산은 54% 증가
 - 특히 삼성, 현대 등 5대 재벌의 계열사는 51%, 자산은 59%나 증가
- 그러나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 :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층의 증가
 - 중산층(평균 소득의 50-150%)의 비율은 1990년에 75%에서 2010년에는 67%로 감소
 - 빈곤층(평균소득의 50% 미만)의 비율은 7%에서 12.5%로 상승
 -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에 새로 생겨난 사업체와 휴·폐업한 업체수가 각각 연평균 60만 개에 이를 정도로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음
- 농민들의 경우 특히 그 삶이 나빠지고 있음
 -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농가의 실질소득(명목소득/농가구입가격지수)은 2,796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7.1% 감소
 - 특히 농업소득은 명목으로도 1,127만원에서 1,01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실질소득은 1,318만원에서 817만원으로 무려 38%나 감소

- 반면에 농가 내부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됨. 즉 5분위 소득비율(상위 20% 평균소득/하위 20% 평균소득)은 1995년의 6.3배에서 2000년에는 7.6배, 2008년에는 9.4배로 증가
- 이는 도시근로자의 5분위 소득비율이 같은 기간에 4.4배에서 5.3배로 증가한 것에 비해 보더라도 농촌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줌

□□ 충남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과 수출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충남도민의 삶의 수준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 충남의 지역내총생산과 수출의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음
- 충남의 일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8년에 2,520만원(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울산의 3,100만원 다음으로 전국 2위이며 전국 평균의 1.43배임.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율은 1998-2007년에 8.4%로 전국 평균인 5.05%에 비해 1.7배에 달함
- 충남은 2009년 540억 달러 수출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29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국내무역흑자의 71%를 담당하였음
- 충남경제의 무역의존도는 2008년에 144.7%(수출의존도 85.7%, 수입의존도 59%)로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높음
- 이러한 화려한 경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경제성장률은 높지만 그에 비해 도민의 일자리, 소득과 소비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임
- 2000-2008년에 충남의 고용 증가율은 1.1%로 전국 평균 1.4%에 훨씬 미치지 못함
- 그 이유는 충남경제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서북부의 재벌계 대기업(삼성, 현대, SK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의 68.1%가 서북부 4개 시군에 집중
- 2004-2008년에 충남에 들어온 3,219개 기업 가운데 60.7%, 이들 기업의 총취업자 약 16만 명 가운데 70%가 4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음

□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세상이 달라지고 있음

- 1국 3중 경제(국민경제 <-> 국제경제와 지역경제)에서 2국 3중 경제(세계경제와 지역경제 <-> 국내경제)로 사회경제시스템 변동
- 1국 3중 경제
- 과거 박정희 시대에는 수출이 늘어나면 재벌이 돈의 대부분을 벌었지만, 일자리가 늘어나

고 임금이 올라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졌음. 즉 그 시대에는 삼성, 현대 등 재벌 그룹의 자본이 한국자본이었고 생산 활동을 한국에서 하였기 때문에 국제경제 부분의 성장은 한국 경제(국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였음. 그리고 지역경제는 불균형 성장논리에 따라 일단 국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면, 그 후 성장한 국민경제의 경제력으로 낙후된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원함

- 2극 3중 경제

-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재벌그룹은 국내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자본도 다국적 자본이고 생산을 비롯해 경제활동을 세계무대에서 하기 때문에 재벌 그룹의 성장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가지 않음
- 재벌 등 초국적 자본은 세계를 무대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국내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국제경쟁을 앞세워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음(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 농산물 가격 하락 등)
- 따라서 국민경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국내 경제는 세계를 무대로 하는 세계경제와 지역민의 삶을 기초로 한 지역경제로 분화됨. 그리고 세계경제와 지역경제는 대립 갈등 관계를 가지면서 공존

□□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세계화 이후 지역경제의 불안정이 증대되고 지역의 불균형발전이 심화되고 있음
 - 지역경제는 세계시장에 통합되면 될수록 불안정성은 증대하고, 지역경제의 흥망성쇠가 초국적 자본의 움직임에 의해 좌우됨
 - 세계화, 특히 금융세계화는 고도의 기업서비스 활동과 정보통신시설이 집중된 이른바 세계도시를 필요로 하고, 세계도시는 세계경제의 지역적 네트워크로 존재하고, 세계경제의 지역적 네트워크에 포함된 일부 지역은 성장하지만, 대다수의 지역은 배제되고 주변화 됨
- 세계화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과 그러한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킴. 즉, 농업과 중소기업의 몰락은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로 진행되게 됨
- 신자유주의는 삶의 공간(생산과 재생산)으로써 지역을 위협하고 있음
 -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경쟁과 시장주의는 노동권의 불안(실업과 비정규직화), 대형 유통 자본에 의한 지역 상권의 잠식과 자영업자의 몰락, 농촌경제의 쇠퇴 등 지역경제를 위협함
 - 신자유주의는 주거, 보육, 교육, 보건의료, 환경, 문화 등에서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사회서

비스의 민영화, 시장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

- 신자유주의적 분권화가 지역의 난개발(환경파괴)과 재정위기를 가져옴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지역이 위기에 처하지만 중앙정부는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없게 되고, 신자유주의 분권화를 추진함. 즉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도록 강요함
-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분권화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재정력과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무분별한 기업유치와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난 개발로 인한 지역 환경의 위기와 지방재정의 위기, 주민의 삶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삶(요구)에 기초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추구해야 함

-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업이 발전해야 함
- 충남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은 2008년에 전체 취업자의 19.5% 그리고 생산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충남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은 지역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크지만, 서북부 지역과 계룡시 등 5개 시군을 제외하면 농림어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별첨 : 충남농업의 주요지표>
-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2007년 기준)은 아산시(0.8%), 천안시(1.6%), 계룡시(2.6%), 당진군(4.8%), 서산시(4.7%), 청양군(34.4%), 부여군(29.8%), 서천군(17.9%), 보령시(17.5%), 태안군(17.1%), 예산군(15.6%), 논산시(14.1%), 공주시(12.9%), 홍성군(10.9%), 금산군(9.35%), 연기군(7.1%) 등
- 서북부 지역의 천안시, 서산시, 당진군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충남에서 낮은 편이지만, 충남 농업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매우 중요함. 천안시는 농가인구 수와 발면적에서 충남에서 제일이고, 서산시는 경지면적이 제일 많고, 당진군은 농가가구 수 1위, 농가인구 수에서 2위, 경지면적 2위(논 면적 1위)를 점하고 있음
- 농업에 기초한 6차 산업의 발전에 충남 지역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음
- 충남의 16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와 아산시 등 서북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농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임
- 이러한 농업생산(1차산업)을 기초로, 농식품 관련 2, 3차 산업이 성립함. 따라서 농업의 쇠퇴는 곧 지역 경제의 쇠퇴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삶의 터전인 농촌이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됨

□ 충남 농업 농촌의 발전은 농민 뿐 아니라 충남 도민과 국민 모두에게 필요함

-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내 농업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글로벌 위기(경제위기, 자원위기, 환경위기의 융합)가 심각해지고 있음
 - 특히 지구규모의 심각한 식량문제 및 고조되고 있는 미래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국민의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이 지니는 가치(다원적 기능)를 증진하지 않으면 안 됨
 - 농업과 농촌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식량안보, 지역경제의 유지, 국토 및 환경의 보전, 인간교육,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무역을 통해서는 제공될 수 없는 이른바 농업의 비교역적 역할(Non-Trade Concerns)로서 국제통상협상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선진국의 예를 보면, 사회가 발전할수록 농업 농촌의 가치는 증대함

2 정부는 그동안 농업·농촌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왜 농업과 농촌은 발전하지 못하였는가?

□ 그 동안의 수많은 정부의 농촌대책(농정개혁과 투융자 계획)은 농정 불신만을 낳았음

- 정부는 1980년 대 이후 수많은 농촌대책을 수립
 - 문민정부의 42조원(1992-8년), 국민의 정부의 45조원(1999-2004년), 참여정부의 119조(2004-13년)의 투융자 계획. MB 정부는?
 - 수차례에 걸친 농정개혁 및 농협개혁 방안
- 그러나 농민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농정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 농민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투융자가 부족하다', '농업·농촌은 희망이 없다'
 - 국민들은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투자는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농특세까지 부담하며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달라진 것이 뭐냐'

□ 첫번째 이유 : 전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농업·농촌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제일주의의 정책이었고, 농정은 그로 인한 모순을 완화하거나 뒤치다꺼리 하는 역할을 담당

- 농정의 방향은 전체 국민경제의 요구, 즉 경제정책의 기조에 의해서 결정되었음
 -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농정은 쌀 증산농정 : 외화절약과 저농산물가격 유지를 위한 수단
 - 19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 농정은 농업구조농정 : 경제개방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구조 조정의 수단
- 농정은 성장제일주의, 수출 지상주의 경제정책의 하위 정책
 -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에 농업·농촌은 공업화·도시화를 위한 역할(희생)이 강조되었고 공업과 도시의 나머지 부분으로 인식
 - 1990년 대 이후 이른바 개방화·세계화 시대에는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 DDA·FTA 논의 과정에서 농업·농촌은 또 다시 희생되어야 할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두번째 이유 : 정부는 농정 목표를 잘못 설정하였음

- 1990년대 이후 농정은 시장개방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농정의 기본이념(목표)으로

합

- 특히 MB 정부는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업', '돈 버는 농업', '수출농업'의 육성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농업외부의 인력과 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농식품 유통회사 및 기업농을 중심으로 농업을 재편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의 수출농업을 우리 농업의 모델로 제시함
- 그러나 이러한 비전은 농업·농촌의 존재가치와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요구, 농민들의 열망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의 역할을 잘못 설정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고, 농업·농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임
- 최근 발생한 구제역 대재앙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화, 규모화, 파밀 사육의 직접적 결과임

● MB 농정의 문제점

- * 문제점 1 : 농업은 인간생명의 필수조건인 식량을 생산하는 생명산업이고 환경적으로 탄소 중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산업임. 그리고 농촌은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민이 삶을 영위하는 농업생산의 공간이면서 국민들의 휴양 및 휴식 공간임

→ 따라서 농업·농촌의 존재 가치는 국제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할 수 없음

- * 문제점 2 : 우리 국민들은 과연 농업이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고 또 수출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가

- 농업생산은 GDP의 2.2%에 불과하고, 농산물 수출액은 총 수출액의 0.7%에 불과함. 순전히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농업의 존재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농업생산과 수출을 늘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것을 위해 국민들이 농업지원을 위해 세금을 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임. 농업에 투자하는 돈으로 더 많은 생산과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

- * 문제점 3 : 기업농으로 농업·농촌의 존재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가

- 우리 농업구조는 여전히 영세소농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들은 농업생산의 커다란 부분을 담당(비율 : 예, 쌀과 한우)하고 농촌의 환경과 국토를 지키는 정원사 역할을 하고 있음. 만약 소수의 기업농이 농업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소농들의 이농이 가속화된다면 농촌사회의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임
- 우리나라 농가의 약 2/3는 1ha 미만의 영세농이고, 전체 농가의 90%가 영세농임. 또한 농가의 42%가 겸업농(제1종 12.6%, 제2종 29.4%)임.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어떠한 농정도 성공할 수 없음

- 세계최대의 농업국인 미국에서도 전체 농장수의 90.5%(2007년 현재)가 연간 매출액 25만 불 이하의 소농이고, 이들이 미국 농업총생산액의 23.1%를 담당하고 있음. 특히 매출액 1만 달러 미만의 영세농도 전체 농장수의 59.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은 1982년 42.5%에 비해 증가추세임. 소농은 경영주의 65세 이상 비율이 32-37%이고, 농업소득은 적사이지만 정부의 직불금과 농외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문제점 4 :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특정 농업 집단을 지원하는 것은 성공할 수도 없고, 시장 질서를 왜곡할 뿐임

- 정부는 우리나라 농업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은 정부의 구조개선정책의 성과라고 하지만, 농업구조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 정책의 효과는 미미함. 오히려 농업구조개선에 투자된 막대한 재정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구조개선, 기업농과 수출농을 육성하기 보다는 시장경쟁에서 낙후된 다수의 농민들이 시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정부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였음

● 그동안의 농정은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이었음

- 정부는 농업투융자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육성해야 할 전업농의 호수를 업종별로 정하고, 개발해야 할 농촌마을의 개수를 정하고, 중앙정부가 기획부터 집행까지 총괄해 왔음
- 이러한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에서는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획일적 농정이 되기 쉽고,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함
- 중앙차원에서 해당 시책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면 특정 사업에 대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낮아져 농정이 불안정해짐

●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은 관료주의와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됨

- 설계주의 농정은 공무원들이 개발독재 시대의 경제계획의 성과를 과신하고 그것을 농정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1-2개의 제철공장을 설립하는 것과 수백만의 농민을 상대로 하는 정책은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함
- 수많은 농정대책은 한국농업·장기적 비전과 계획에 의한 농정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심각한 농촌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거나 집권당의 농촌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농민 길들이기 혹은 환심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음
- 집권당이 정치적으로 생색을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농정을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됨

- 생색을 내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사업은 하드웨어성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되고, 소프트웨어성 사업은 지극히 미미해야 함
- 농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매우 적음
 - 2010년 충남의 농림수산 사업비 1조 536억 원의 구성을 보면, 국비 48.9%, 도비 11.8%, 시군비 22.1%, 용자 5.5%, 자부담 11.7%로 되어 있음
 - 그런데 국비 사업비에는 도비, 시군비,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면, 충남 농림수산사업비의 72%가 국비 사업에 들어감
 - 특히, 도비 사업비는 1,240억 원 가운데 609억 원(49.1%)이 국비에 매칭되고, 606억 원(48.8%)이 시군비와 매칭되고, 도 자체 사업비는 25억 원(2.1%)에 지나지 않음

3. 중앙정부는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농업 농촌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재정립

- 농정 비전을 국제경쟁력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로 전환
 - 칼 폴라니 : 자본주의 시장메커니즘은 상품이 될 수 없는 '토지, 노동, 화폐'를 상품화한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 토지의 산물인 농산물은 시장경쟁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물임. 그러한 생산물에 대해 국내 시장도 아니고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경쟁을 전제해서 수립되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음
 - 개방 체제 하에서 농산물의 무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제경쟁력이 농정 이념이 될 수는 없음. 국제경쟁력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사회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음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농업인(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 순환과 공생의 도농 공동체 만들기

☐ 농정의 대상을 농업(인)에서 농업, 식료, 농촌지역으로 확대

- 농정을 부문 정책에서 농업·지역·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적 농촌정책(integrated rural policy)으로 전환해야 함.
 - '농업=농촌' 혹은 '농업생산성의 향상=농업발전=농촌발전'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음
 - 과거의 농정은 농업부문 근대화 혹은 농촌공업부문 육성 혹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 부문 정책이었지, 농촌이라는 지역에 기초한 통합적 농촌정책은 거의 추진되지 않았음
 - 오늘날 농정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정책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일반 국민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공급, 환경보전과 농촌지역의 진흥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농업정책, 농촌정책, 식품정책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2월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여 식료를 농정의 수

비 범위에 포함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농정의 중심은 농업정책이고 그 중심 이념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이고, 농업·농촌·식품정책 사이의 연계성은 약함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은 농촌경제의 기반임. 또한 농업관련 전후방 산업 및 서비스업은 농촌경제의 기간산업이며, 다양한 직불제는 농가경영의 안정과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조건불리지역, 환경보전 등)에 기여함. 농촌개발전략이 외생적 개발에서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면서 농업과 농촌개발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
-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라고 하듯이 식품정책과 농업정책 사이에는 매우 높은 보완관계를 지니고 있음.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식량자급률(칼로리 자급률 포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국내의 농업 생산기반이 필요함.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의 농업 생산을 친환경적으로 개편하고 안전한 국산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함.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조직화를 통해 생산과 소비를 직접 연결하는 지역순환 농식품체계(local food system)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관련 산업(가공 및 유통)은 농촌사회의 주요한 경제적 기반이고, 특히 농촌지역에 뿌리를 둔 농식품 산업의 발달은 농촌사회 활력의 기초가 됨

□ 농정의 추진체계 개편

● 농정 각 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

- 시장과 정부의 역할 : 농업은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원리에 맡기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국가에 의한 국경보호와 국내보조가 필요한 산업임. 특히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시장에서는 달성될 수 없고, 농업·농촌의 상대적 낙후는 시장 실패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농정으로서는 농업·농촌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음
- 그렇다고 정부가 농업부문에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의 문제이고, 이는 농정 각 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임

● 농민의 주체성을 확립해야 함

- 농업의 주인(주체)은 말할 나위 없이 농민임. 농업·농촌문제는 농민과 농촌주민 스스로의 자각과 주체적 노력이 없는 한 문제 해결의 전망은 없음
- 농민은 농정의 시혜 대상이 아니라 농정의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하여야 하고, 농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농정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각각 분명히 해야 함

-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농정의 일 주체인 농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임

- 중앙정부는 한국 농업(농촌)의 장기적 비전하에서 농업·농촌의 활성화 조건을 마련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조장)할 수 있는 정책(가격 및 소득정책과 농촌생활여건정비)과 영농애로를 타개하는 정책(제도개혁, 생산기반 정비나 대형 기계 및 시설의 도입, 농업기술 개발 보급, 농민력 개발 및 교육), 그리고 농업관련 기초 서비스(통계, 농산물 등급화 검사, 시장 및 가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한편 농지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등을 실시
- 그렇지만 이러한 역할을 중앙정부가 모두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음. 농가소득과 관련된 가격 및 소득정책이나 여건(제도) 정비 기초 서비스 등은 중앙정부가 직접 담당하지만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커다란 방향 및 틀만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이나 집행은 지방정부에 맡겨야 함
- 농업·농촌의 발전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함
- 농업생산은 본래 강한 지역성을 띠 수밖에 없고 일정한 지역을 범위로 이루어지며, 각 지역은 자연적 조건, 역사적 전통, 사회경제적 조건이 매우 다름
- 한 나라의 농업은 이러한 개성이 풍부한 지역농업의 종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은 지역 농업의 발전을 통해서 실현됨
- 지자체는 농업생산 측면 뿐 아니라 유통 및 판매, 가공, 소비 등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농업계획을 수립해야 함
- 이러한 지역농업계획은 지역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함
- 중앙집권적 획일적 농정체계를 지방분권적 자율적 농정체계로 전환해야 함
- 지방분권적 농정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과 민의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국가사무와 지방 사무를 재조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강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함
- 사무이양에는 반드시 재정 이양이 뒤따라야 함.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전, 지방채의 자주적 발행 권한 부여 등 지방의 자주세원을 확대하고, 국가보조금은 점차 줄여가되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함. 다만,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교부세(수직적 및 수평적)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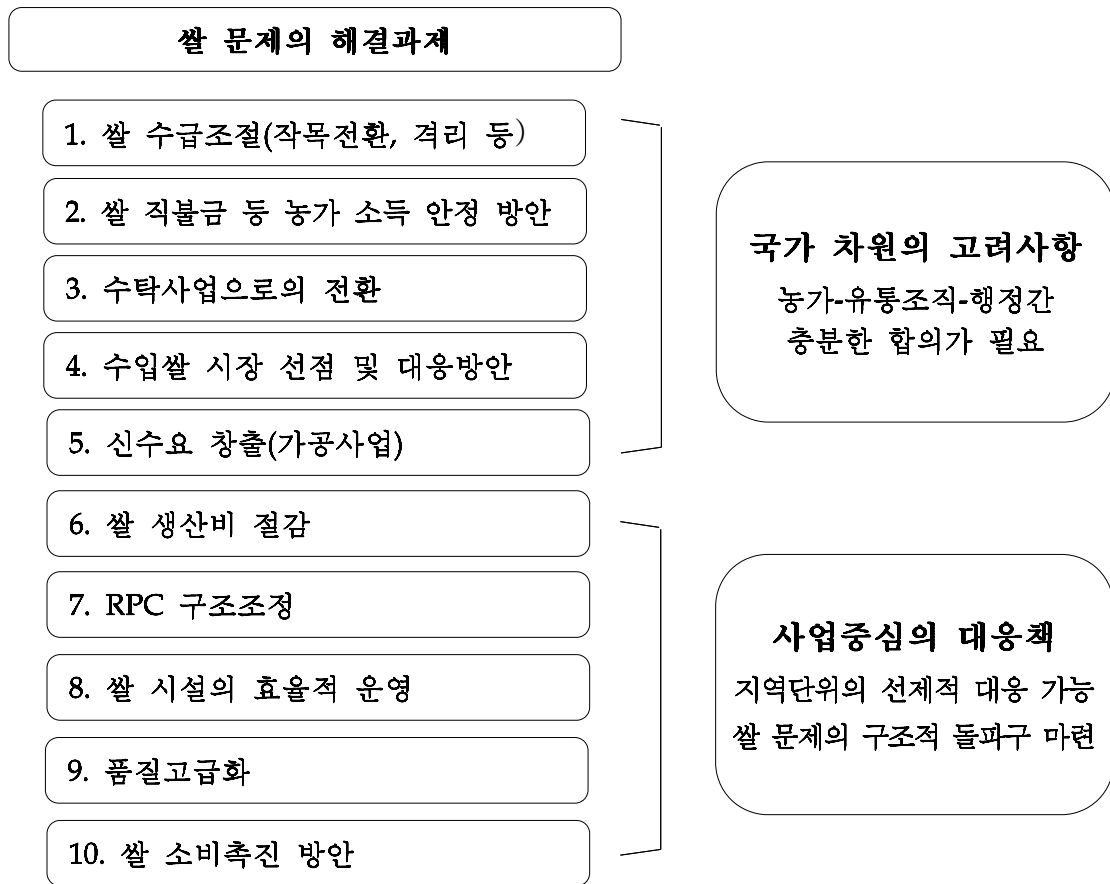
4. 충남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충남농정을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가?

☐ 충남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자

- 농업·농촌의 비전
 - 민선 4기의 농업·농촌의 비전 : '세계시장과 경쟁 가능한 강한 농수산업',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풍요로운 농촌'
 - 민선 5기의 농업·농촌의 비전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
- 농정 목표
 - 민선 4기 :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가치 중심의 고품질 농식품산업', '살고 싶고 풍요로운 농촌', '앞서가는 스마트 지방농정'
 - 민선 5기 : '충남 농민(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충남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의 보장', '순환과 공생의 충남 도농 공동체 만들기'
- 가치 및 핵심 전략
 - 분권과 자치 : 농정 추진체계의 혁신
 - 주체 역량 : 농촌 지역리더 양성
 - 협동과 연대 : 지역사회와의 연대 조직화
 - 순환과 공생 : 대안적 사회경제시스템의 구축

☐ 충남도의 역할을 재정립 하자 : 지방분권과 협치(거버넌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 충남도가 해야 할,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여 집중
 - 쌀 정책의 사례(충남도의 역할) : 친환경 고품질 유도, 생산비 절감 및 충남 쌀 마케팅, 시설의 효율적 이용 등



● 중앙농정의 지역화

- 충남도의 농업·농촌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국비사업인 현실을 감안할 때, 최대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국비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이 중복 혹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지방정부(도와 시군)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의 농정 관련 부서들의 협력, 기능별 통합과 조정이 필요
- 국비 보조 사업에는 반드시 도비와 시군비 그리고 농민의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국비 사업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즉 국비 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 많이 능사가 아님
- 중앙정부 사업을 지역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개선방안과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함

● 충청권 광역 지자체 간의 협력 관계 구축

- 충남과 대전의 경우,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 뿐 아니라 환경과 자원의 공동관리,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연계 사업의 추진 등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충남과 대전의 협력관계를 충북을 포함한 광역 충청권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과 협력 : 도와 시군의 상생적 분권
 - 도에 비해 시군의 예산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실제로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는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도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따라 가능한 한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예산지원)와 감독기능(인사권과 감독권)을 적절히 사용해야 함
 - 동시에 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능이라는 인식 전환과 도와 시군 사이에 상생의 지방분권이 필요함. 따라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과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기초지자체의 사업별 혁신 모델 혹은 행정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 지역금융기관(농협), 상공회의소, 대학, 민간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소비자단체와 농민단체) 등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농정에 도입
 - 충청남도 농수산혁신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농민 단체를 비롯해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
 - 특히 농협과의 협력을 강화함. 예를 들어 농협과 협력하여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농협중앙회 충남본부에서 2000년부터 '지역농업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계기로 광역·기초 수준에서 경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계 구축 : 농협의 지역사회 공헌·사업 유도

5. 충남 농정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 충남 농정의 기본 과제

- 삶터(생활공간), 일터(경제활동 공간), 쉼터(경관 및 환경 공간)로써 농촌을 발전시키고, 이를 담당할 농촌 지역리더를 육성하는 것

1) 삶터: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농촌 서비스 기준 도입 및 시행

- 중앙정부는 2010년 농촌서비스 기준제도 도입
 - 국민 최소한 수준(National minimum)의 관점에서 농촌 주민이 도시민과 함께 최소한의 시민권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생활여건을 마련하는 것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촌 서비스 기준의 제정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여 공포(2010.7.23). 2011년 1월24일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 개정
 - 농촌 서비스 기준 : 농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s) 항목과 수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의 8개 분야 31개 항목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 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시 농촌 서비스 기준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규정. 기본계획 뿐 아니라 시행계획과 시도계획 그리고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문화
 -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 대안 마련
 - 수범사례 발굴.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 서비스 공급방안이나 전달체계 제시
 - 기초생활권 계획과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과 연계
- 농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정책과제
 - 충남의 기초생활권 시군의 공공서비스 수준은 전국 평균에 비해 대체로 낮을 뿐 아니라 16개 시군별로 격차가 매우 큼. 따라서 농촌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 충남은 더욱 절실한 실정임<별첨 : 충남 공공서비스 공급지수>
 - 삶의 질 향상 시·도 계획에 농촌서비스 기준을 반영하여 성과목표 및 지표 재설정
 - 농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의 주기적 점검과 컨설팅 체계 구축 : 시군별 이행실태 점검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파트너십 구성 : 삶의 질 향상위원회 ; 공공부문, 기업부문, 제3섹터, 주민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등 지역 주요 주체들 간 파트너십 형성. 예, 영국의 LSPs(Local Strategic Partnerships)
- 농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적 기업의 육성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목적 : 지속 가능한 도농 공동체 만들기
 - 지역 만들기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생태적)으로 통합적인 발전을 추구함. 경제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기초에 지나지 않음. 경제적 개발이라는 하나의 관심만으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지역의 파괴나 쇠퇴를 가져옴
 - 생태계의 보전과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지향하는 장으로서 지역을 재생하는 것이 지역 만들기의 기본목표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원리 : 순환과 공생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의 공생,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생의 원리는 순환의 원리에 의해 뒷받침됨
 - 첫째, 순환과 공생의 지역 경제 : 지역경제의 순환과 자립, 생산과 소비의 순환(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생), 도시와 농촌의 순환(공생)
 - 둘째, 순환과 공생의 지역 사회 : 인간 간의 공생(협동과 연대), 지역자치
 - 셋째, 순환과 공생의 생태계 : 생태계의 순환, 지역자원의 순환과 환경재생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실천과제
 - 자립적 지역 경제의 실현 : 로컬 푸드/지역농업조직화/재래시장 활성화/지역특화산업 육성/지역통화/도농교류/농업 6차 산업화/사회적 경제 확대
 - 분권과 자치의 지역공동체 : 지역복지 공동체/지역교육 공동체/지역문화 공동체/여성·보육 공동체/주민 참여, 주민자치, 공동 학습 활동
 - 생태계의 보전 : 지역 자연 순환형 농업/에너지 자립형 마을/리사이클링(폐기물 재활용, 순환형 지역사회 실현)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충남도의 과제
 - 충남형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개념 정립
 - 기존 마을(지역) 만들기 관련 사업의 실태조사 및 평가

- 지역 만들기 역량 조사 및 충남형 지역 만들기 모델 개발 연구
- 지역 만들기 전담 지원 조직 구성
- 지역(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의 단계적 추진

2) 일터 : 경제활동의 다각화(농업의 발전과 6차산업화)

☐ 친환경 농업의 발전

- 친환경·유기농업을 충남 농정의 기본 토대로 설정하고, 농업관련 예산을 친환경·유기농업 중심으로 조정 확대
 - 2020년까지 친환경 농업(면적 기준)을 15%로 확대 : 충남 친환경농업관련예산 2010년에 667억 원. 전남은 2014년까지 45% 목표로 연간 3,324억 원 투입자
- 친환경농업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육성
 -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충남친환경농민단체 육성 지원
- 지역 순환형 농업생산
 - 축산분뇨의 자원화/경축복합농업/에너지 자립

☐ 로컬푸드 :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

-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기본계획 수립
 - 지역농식품정책협의회 구성
 - 충남 농식품부문 실태조사
 - 도민 여론 수렴, 공청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한 여건 조성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 친환경 무상급식과 공공급식의 확대
 -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광역 및 기초(물류 센터가 아닌 정책 센터)
 - 공공 급식 실태 조사

-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 활동 지원

- 농민장터 운영
- 도시농업활성화
- 식생활교육
- 도농교류
- 지역농식품 홍보 등

□ 6차 산업화

- 6차 산업의 개념 : 1차 산업(생산) * 2차 산업(가공) * 3차 산업(서비스, 유통 및 판매) 혹은 (1차+2차+3차 산업) 형태의 융복합

- 충남의 농가소득의 구성(2009년)을 보면 농외소득이 42.9%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농촌은 이미 농업생산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음

-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 직거래 자금 지원 확대 및 소비지 판매장 사업 지원
- 친환경 농산물 식품가공 산업 육성 : 지역특화품목을 중심으로 한 광역 친환경가공공장/시군 지역단위의 다품목 소규모 가공센터

- 지역특화품목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발전 지원

-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의 구축

- 지역생산 농산물의 가공/직거래/도농교류
→ 6차 산업의 안정적 수요 기반

- 도농교류의 확대

- 충남 도농교류 지원 센터 설립 :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포함
- 도농교류 관련 기관 통합/정책수립/교육 및 홍보/도농교류 인력 양성/농산어촌 체험마을 주민교육 및 재교육/귀농귀촌지원

- 지역자원의 활용 산업화 : 고유가, 화석연료로부터 자립 및 소득원 창출

-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바이오매스(축산분뇨, 잡곡, 농업생산 부산물, 폐식용유 등)를 활

용한 지역 에너지 생산(자립)

- 2014년 이후의 화력 발전세(약 167억원)의 절반 정도를 지역 에너지를 장려하는 발전 차액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 6차 산업 플래너 육성 : 충남발전연구원의 충남농업6차산업화센터(구 농업테크노파크)의 역할 제고

3) 쉼터 :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회복

☐ 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레저와 휴식(휴양) 공간

-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
- 농촌다움(rurality)의 보전 : 농촌지역의 도시 따라잡기식 개발 지양(예, 아파트 건설)

☐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회복 지원

- 자연환경 보전
- 야생동식물 보호
- 유형·무형의 전통적 문화유산(전통 건축물, 문학 및 예술, 축제, 식문화 등)/지역의 개성
- 환경 및 경관 보전 직불제의 활용
 - 환경 및 경관의 보전은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관광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기여
- 농촌경관계획 수립
 - ☐ 농촌지역의 농업자원(농지, 물, 토양 등)의 보전

4) 주체 형성 : 농촌 혁신 리더 양성

☐ 충남도 지역리더 육성 계획 수립

- 부문별 지역리더 육성 연차 계획 수립
 - 지역개발부문/협동조합부문/친환경농업부문 등
 - 충남도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과 비용을 분담하고, 시군은 교육 참가자를 선발하고 관리
- 지역리더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충남도가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주도할 지역리더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은 외부 민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 지역 주민들의 상호 학습을 조장하기 위한 지원

□ 충남도 지역리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현행 농촌리더 교육의 문제점
 -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많은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주민들은 유사 중복 교육의 이수로 인해 일종의 교육 피로증에 시달리고 있음
 - 교육수료자와 사업대상자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통합적인 지역리더 관리 시스템의 구축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수료자와 사업대상자 선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역리더 관리 시스템이 필요
 - 역량 강화 교육 이수자 풀(POOL) 구축

□ 액션 러닝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

- 주제 역량강화의 두 가지 방법 : 교육·훈련과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
 - 교육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파일럿(pilot)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사업계획 역량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행정과 주민 사이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함. 예, EU의 LEADER 프로그램, 진안군의 Green Village 사업, 옥천군 향수30리 아카데미 프로젝트반 등
 - 충남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군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집행과정을 감독·자문하고 사후 추진결과를 도에 보고함

□ 외부 인재 수혈

● 귀농 귀촌의 활성화

- 지역리더의 상당수는 도시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귀농·귀촌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임

● 개방형 공무원(계약직) 제도의 도입

- 민간기업 또는 대학교 등 민간 부문의 우수한 인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전문분야의 공공 행정을 담당하도록 함
-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계약직 공무원'은 총 3,087명(광역시지자체 1,458명, 기초지자체 1,631명)인데 이는 2002년의 1,163명에 비해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임
- 모범적인 사례는 전북 진안군의 마을 만들기 팀, 전북 완주군의 '지역경제순환센터' 등

□ 핵심 농업인 육성

6. 맺음말 : 과연 되겠는가, 누가 할 거냐?

☐ 과연 충남의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거냐?

- 우리 자신에게 달렸음

-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는 주체적 결단이 필요
- 다만,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우리 농업과 농촌은 당장 망하지도 그렇다고 당장 좋아지지도 않음
- 그렇지만 시대는 농업·농촌 편임 : 글로벌 식량위기·기상이변으로 인한 국내식량생산의 중요성,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대 등으로 국내 농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쾌적한 삶터·일터·쉼터로써 농촌의 가치도 증대하고 있음

☐ 누가 할 것인가?

- 농촌에는 늙은이 밖에 없고 사람이 없다는 말은 틀렸음

- 2005년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는 총인구의 18.5%인 876만 명이 살고 있고, 농가인구만 해도 340만 명에 달함. 2005년 현재 충남의 농가인구는 44만 6천명임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민 인구 비율은 35%인 것에 비해 일본은 62%임. 농업대국인 미국의 경우도 소농 경영주의 65세 이상 비율이 32-37%임
- 농촌에서 60대는 장년층임.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60세 전후였기 때문에 40대가 장년층이었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기 때문에 60대가 장년층임
- 농사는 원래 나이 먹고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임

- 농촌인구의 절대수가 아니라 ‘활기 있는 농촌 주민’의 수가 중요

-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지만, 농촌생활이 지니는 우위성(안전, 건강, 쾌적함, 연대 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활기 있는 농촌주민’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이들이 농촌의 주인이 될 것임
- 최근 연간 1만 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하고 있고, 충남은 그 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한 조건(입지 및 자연 여건 등)을 갖추고 있음
- 또한 농촌의 어메니티와 먹을거리 자급을 추구하여 농촌을 찾는 도시민도 크게 증가할 것임

☐ 농업·농촌의 발전은 농민 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응원

- 일본의 2010년 ‘신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 농정의 기본방침으로 ‘국민 전체가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사회의 창조’를 표방하고 예산 지원
 - 국민 참여 확대방안으로는 ① 농업·농촌가치 및 역할 홍보, ② 식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식생활운동, ③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활동
 -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 : ‘FOOD ACTION NIPPON’과 ‘아침밥 먹기 캠페인’
 - 도농활성화를 위한 국민운동 : ‘all right 일본’과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

- 충청남도는 전 도민적 차원에서 농업·농촌을 응원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함
 - 어릴 적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들이기 위한 식생활 교육 : 중앙정부 차원의 운동에 적극 참여
 - 학교 텃밭 프로젝트 : 농업·먹을거리의 가치 체험 교육과 정책 홍보(미국 미셸 오바마의 백악관 텃밭 활용 사례 등)
 - 도시텃밭 프로젝트

<부록 : 충남 농정의 비전, 목표, 가치 전략 그리고 추진 과제>

비전	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통해 상생·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농어업인(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 충남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 순환과 공생의 충남 도농 공동체 만들기 			
핵심가치	분권과 자치	주체 역량	협동과 연대	순환과 공생
핵심전략	농정추진체계의 혁신	농촌지역리더 양성	지역사회 연대 조직화	대안적 사회시스템 구축
주요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혁신위원회 • 중앙농정의 지역화 • 농정분권 • 도/시군의 상생분권 • 민관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 지역리더 육성계획 수립 • 지역리더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적 지역 경제 실현 - 지역공동체 - 환경 및 경관 보전 - 에너지 자립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농 중심의 지역농업조직화 • 생산자/소비자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직거래, 공동체 지원 농업 - 도농교류센터 설립 • 도 차원 농업 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보험 - 영세농·고령농 생활안정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업 및 생산자(단체) 육성 •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 • 지역순환형 농업 확립 • 사회적 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형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기업, 협동조합, 생협 등 육성 • 농어업 6차 산업화

<별첨 1 : 충남 농업의 주요지표>

지표명		지표	시도 순위	기준시점	비 고
10a당 쌀 생산량		568kg	2	'09. 12.	전국평균 534kg
벼 재배면적		160,952ha	2	'09. 12.	전국의 17.5%점유
벼 경지면적		238천ha	3	'09. 12.	전국의 13.8%점유
경지정리율		92.2%	1	'09. 12.	전국평균 90%
경지면적대비 농업진흥구역비율		72.1%	1	'09. 12.	전국평균 58.7%
농어가 인구		454,455명	3	'08. 12.	전국의 13.4%점유
농수산물수출액		413,000천불	3	'09. 12.	
가 축	한 우	344천두	3	'09. 12.	전국의 13.1%점유
	젖 소	84천두	2	'09. 12.	전국의 18.8%점유
	돼 지	1,786천두	2	'09. 12.	전국의 18.6%점유
	닭	26,439천두	2	'09. 12.	전국의 19.1%점유
축산물작업장		154개소	-	'09. 12.	
치어방류		8,382만 마리	-	'09. 12.	
친환경농산물생산량		187.8천 톤	5	'09. 12.	전국 2,209천톤
친환경농산물생산비율		8.5%	-	'09. 12.	전국평균 12%
밤 생 산 량		28,141톤	1	'09. 12.	전국 75,171톤
생표고생산량		10,364톤	1	'09. 12.	전국 25,242톤
건표고생산량		438톤	2	'09. 12.	전국 2,032톤
은행 생산량		474톤	1	'09. 12.	전국 1,160톤
호두 생산량		199톤	3	'09. 12.	전국 979톤
농어촌진흥기금지원		222억		'09. 12.	

<별첨2 : 충남의 공공서비스 공급 지수>

기초생활권 시·군의 공공서비스 부문별 공급지수: 2005년 기준

서비스 부문	기초생활권 시·군			충청남도		
	군	도농통합시	일반시	군	도농복합시	16개 시·군
주거	4.388	5.461	6.195	<u>4.558</u>	5.296	4.881
교통	4.750	5.024	6.243	5.086	5.069	5.078
교육	4.895	4.730	5.932	4.852	<u>4.718</u>	<u>4.793</u>
보건의료	4.769	5.073	5.660	5.059	5.122	5.087
사회복지	4.620	4.841	6.668	<u>4.655</u>	<u>4.756</u>	4.699
응급	4.672	4.822	6.525	4.850	4.811	<u>4.833</u>
문화여가	4.952	5.009	5.148	4.877	4.874	4.876
정보통신	4.510	5.063	6.592	<u>4.618</u>	5.102	4.829
종합지수	4.695	5.003	6.120	4.819	4.969	4.885

주 : 전체 시·군의 평균 서비스공급지수 값은 5.000임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공공서비스 부문별 공급지수: 2005년 기준

시·군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종합지수
천안시	5.914	5.287	4.739	5.379	5.031	5.110	5.035	5.470	5.246
공주시	5.067	4.702	4.740	5.408	4.717	4.645	5.183	4.792	4.907
보령시	5.101	4.927	4.777	5.103	4.630	4.912	5.018	4.683	4.894
아산시	5.169	4.431	4.630	4.998	4.883	4.822	4.598	5.047	4.822
<u>서산시</u>	<u>4.955</u>	<u>4.136</u>	<u>4.621</u>	<u>4.759</u>	<u>4.628</u>	<u>4.813</u>	<u>4.601</u>	<u>4.855</u>	<u>4.671</u>
논산시	4.621	5.438	4.851	5.530	4.824	4.895	5.016	4.787	4.995
계룡시	6.244	6.565	4.669	4.675	4.579	4.480	4.671	6.078	5.245
금산군	4.333	5.425	4.833	5.023	4.619	4.696	4.827	4.525	4.785
연기군	4.935	5.110	4.760	4.860	4.851	4.766	4.641	4.976	4.862
부여군	4.521	4.945	4.912	5.340	4.650	4.755	4.618	4.429	4.771
서천군	4.100	5.129	5.016	5.524	4.806	5.101	5.039	4.596	4.914
청양군	4.032	4.895	4.973	5.003	4.553	4.958	4.812	4.436	4.708
홍성군	4.849	5.169	4.911	5.348	4.718	4.914	5.350	4.715	4.997
예산군	4.848	5.083	4.784	4.803	4.565	4.954	4.699	4.763	4.812
태안군	4.799	4.734	4.726	4.766	4.536	4.759	4.850	4.462	4.704
당진군	4.608	5.282	4.750	4.867	4.600	4.748	5.056	4.658	4.821